

북한의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Online Series

2023. 12. 31. | CO 23-42

대남 전략: 통일전선전술에서 ‘단절과 정복’으로 전환

지난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5일 동안 개최된 북한의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대남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정세 인식에 따라 첫째, 북한은 그들의 공식적 통일방안이었던 고려연방제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라고는 하지만 인민민주주의혁명(남한체제 전복)에 의한 북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우리의 강력한 거부와 함께 남북한의 국력 차이로 인해 북한의 전술에 호응하는 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남북 간 접촉과정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는 상황(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에서 북한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남한 내 ‘혁명세력’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북한은 핵무력 등 무력에 의한 남한영토 점령을 공언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일성 시대 초기에 추구했던 이른바 ‘민주기지론’과 ‘영토완정론’으로 향후 김정은 정권의 무력통일론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셋째, 전원회의의 결과에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을 언급했다는 점은 남북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통일전선부는 그동안 통일전선 전술을 위한 공작과 함께 남북대화, 접촉, 교류를 관장해 왔다. 이 기관들이 정리·폐지된다면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북관계의 단절과 차단이 될 것이다. 대신에 힘으로 제압해 나가는 압박전술을 쓸 것이며 통미봉남을 추구할 것이다.

군사 부문

핵무력에 의한 남한 영토 정복 계획 언급

북한은 2022년 말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까지 제기한 바 있다. ‘대적행동’을 남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했었던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더 나아가 한미가 대결을 기도한다면 “핵전쟁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가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는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적인 차원의 ‘민족’과 ‘통일논의’를 포기하고 적대적 교전국가로 남북관계를 정리해 핵무기 대남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무력 통일 위협을 가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쟁 현실화 가능성과 핵위기 대응을 강조한 부분이다. 최근 한미의 정권 종말 언급, <워싱턴선언> 및 <핵협의그룹> 가동에 따른 확장억제체제의 강화, 핵작전연습 시행, 전략자산의 최대규모 전개 등을 전쟁 현실화, 핵위기 사태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유엔사를 다국적 전쟁기구로 확대하는 움직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언급들은 크게 실제 느끼는 압박에 대한 방어용, 핵무기 고도화 명분용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한미(일)의 대북 억제태세 강화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전쟁 현실화 가능성 차원에서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 이번 당 전원회의 언급에서 “안전상황 예리하게 주시”, “예민하게 관리”, “압도적인 자세 대응”, “국가 안전 철통 수호 위한 군사적 대책들”을 동시에 언급했다.

국방력발전 세부과업 구체적 언급, 미 대선 염두 불가역적 핵무기 고도화 과시 목적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2024년 수행할 국방력발전 과업들을 세부적으로 공개한 점이 이례적이다. 군수공업 부문, 핵무기 부문, 미사일 개발·생산 부문, 우주개발 부문, 선박공업 부문, 무인항공공업 부문, 탐지전자전 부문, 민방위무력 부문 등 총 8부문에 대한 세부과업을 언급했다.

<표 1> 국방력발전 2024년 세부과업

과업 부문	내용	의도	예상 정보
군수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장비 개발생산 확충 · 당 국방발전전략 성공적 실행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생산 우선순위 · 자체 전력화 수요 · 러시아 공급 물량 · 해외 무기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기계공장 현대화
핵무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생산계획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물질, 핵탄두 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물질 추출 확대 · 핵실험 가능성 · 핵탄두 양산체계
미사일 개발 및 생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목표와 전투적 과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일 완성형 모델 다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체형 중거리탄도미사일 · ICBM 완성도 제고 · SLCM, SLBM · 공대지, 공대공
우주개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개발일정 의식 경쟁적 우위 과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4월 발사일정 고려 앞서 2호기 발사 가능성 · 북러 기술협력 가능성
선박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함선공업혁명 · 해군 수중 및 수상전력 제고 · 국방력발전 5개 중점목표 중 미진한 과업 빠른 기간 집행(중심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 현대화 10개년계획 시작 · 국방력발전계획 성과 최대화 	
무인항공공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무인무장장비 개발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정찰기, 전투용드론 등 전력화 및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정찰기, 전투용 드론 이용한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위협 비행 과시 · 러시아 및 중동에 공급 가능성
탐지전자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전수단을 개발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술핵 실전화에 따라 EMP 목적 구체화 	
민방위무력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적위군 싸움준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준비 차원의 긴장 조성, 주민 통제·결속 	

우선 군수공업 부문은 무장장비 개발·생산의 확충을 강조했는데, 세부과업 중 가장 먼저 언급했고 국방발전전략의 성공적 실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 때, 군수생산이 올해 국방 부문에서 핵심과업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요 기계공장 현대화를 강조한 것도 군수생산 증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자체의 전력화를 위한 군수생산 용도도 있겠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전시물자 공급, 중동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 대한 해외 무기수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핵무기 부문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전술핵 다량화와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대’와 동일선상에서 증산을 강조했다. 크게 핵물질 생산, 투발수단(미사일) 등이 해당되는데, 최근 영변 핵단지에서의 원자로 가동이 활발해졌다는 정황보고로 보면 핵물질 생산을 최대화하고 여기에 맞춰 핵탄두 양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생산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일정 양의 계획적 생산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개발 및 생산 부문은 중점목표와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언급, 미사일 완성형 모델의 다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에는 고체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ICBM 모델 완성도 제고, 잠수함 발사 또는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SLC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국방발전전략회 ‘자위-2021’ 공개)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주개발 부문에서 내년 정찰위성을 3기 추가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1년에 3기 추가 발사라는 다소 무리해 보이는 일정은 한국의 4월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일정을 의식하여 북한은 경쟁 차원에서 한국보다 한 발 더 앞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러북 기술협력을 통한 정찰위성 개발의 가속화가 2024년 중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다 앞서 2024년 4월 전후 2호기를 발사하고 미국 대선 전 나머지 2기를 추가 발사하는 일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넷째, 선박공업 부문은 “제2차 함선공업혁명”, “해군의 수중 및 수상전력 제고”, 국방력발전 5대 중점목표 수행에서 미진한 부분 집행 등이 제시됐다.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지난 해군절에서 밝혔듯 해군현대화 10개년계획 차원에서 해군 전력을 중장기적으로 증강하는 사업, 다른 하나는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에서 제시했으나 미진한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등과 관련한 무기 실험을 2024년에 가시화하는 것이다. 당장 핵잠수함이 가시화되긴 어렵고 로미오급 디젤 잠수함 개조, 중장거리급 SLBM이나 핵어뢰 등이 가능해 보인다. “빠른 기간 안에 집행하는 것을 중심과업으로 제시”했다고 밝힌 만큼 2024년 상반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무인무장장비와 전자전수단의 개발·생산을 강조했는데, 무인정찰기 및 전투용 드론의 전력화 및 수출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인정찰기나 전투용 드론을 이용하여

9.19 군사합의 파기 행동을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위협 비행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 러시아 및 중동 등 전 세계 전쟁 장비 수요가 늘어난 것에 부응해 수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부문

주민들과 청년들의 정치사상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자평

북한은 2023년 김정은이 제시한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주민들과 청년들의 사상정신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며 만족을 드러냈다. 2023년 9월 국가핵무력강화정책을 헌법에 명기한 것과 11월 도·시·군인민회의 선거에서 사실상 제한적으로 복수후보를 허용한 ‘민주주의 개선’ 조치 등을 정치 분야의 성과로 제시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제도보위, 정책보위, 인민보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한 이후 매년 법규범과 규정이 세분화·구체화되고 있는데, 2023년에도 110여 건의 부문법과 규정들이 새로 제·개정되어 법·제도를 체계화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북한의 당회의체 운영패턴이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이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를 통하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전원회의들에서 그 집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적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당의 영도방식”이라고 주장한 이후, 북한은 상·하반기에 각각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및 해당 연도의 전반적 국정운영 상황을 총화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운영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2022년 말 제8기 6차 당 전원회의에서 최초로 당 전원회의 기간에 정치국회의를 개최하여 결정서 초안 수정보충, 예산안 검토 등을 심의하였는데,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도 그대로 시행되었다. 당정책의 권위와 집행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치로 이해된다.

2024년 최고인민회의 선거,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뒷받침할 듯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는 “현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아직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24년이 김정은 출생 40주년이 되는 해이고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예정된 해이므로,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정은 우상화와 국가주권기관 집행력 강화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과 달리 2024년에는 정주년에 해당되는 정치 행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열병식 같은 대규모 행사 대신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내실화에 주력할 것이다. 2022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정식 당의 노선으로 채택된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등과 같은 김정은 연설을 당의 공식 노선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는 향후 ‘김정은 혁명사상’의 체계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원회의에서 “국가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데서 인민주권기관들과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 앞에 나서는 정책적 과업들”이 명시되었다고 했는데, 국경개방 조치에 따라 사회주의 법치를 통한 사회통제도 강화될 것이다. 2024년 3월에는 제15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정부기관과 중요 직제 간부들 10명이 새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북한이 2024년을 5개년계획 성패의 분수령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상당 폭의 간부 교체가 예상되고, 김정은 출생 40주년을 맞아 일반 대의원의 세대교체도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긍정적 정책 평가에도 상당 폭 인사 조치

이번 전원회의에서 단행된 인사 규모는 중폭이라 할 수 있다. 부정적 정책수행에 따른 문책의 성격이 강했던 2022년 말 제8기 6차 당 전원회의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때와 신규임명자(중복 포함)를 비교하면, 당·정·군 신규임명자는 67명에서 65명으로, 그 중 당지도기관(중앙위, 정치국, 중앙군사위, 중앙검사위) 신규임명자는 51명에서 45명으로 약간 줄었다. 무력기관 신규 임명자(이전 3명)는 없고 정부인사가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게 특징이다. 2023년도 긍정적인 정책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사 폭이 크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제8기 6차 당 전원회의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은 박정천이었다. 군 서열 1위였던 그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도 박정천이 단연 주목받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당중앙위원, 당정치국원, 당비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이전 자리에 거의 복직된 것이다. 물론 박정천의 원수계급장 착용과 군정지도부장직 수행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김정은 시대에 더욱 방대해진 국방 분야에 있어 역할 분담과 충성경쟁을 요구하는 김정은의 인사 조치로 이해된다.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포함된 인사의 기용이다. 대리 포탄 생산을 책임지는 군수공업부장 조춘룡이 당정치국원과 당비서로 승진했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일호가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총장에 임명되었다.

경제 부문

경제부문 보도에 상당 비중 할애, 성과 달성을 수치로 제시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경제 분야의 성과를 언급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2023년 목표로 제시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를 비롯한 주요 부문의 성과를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주요 부문의 성과 달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첫째, 지난해 말 제시된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이다.¹⁾ 올해 7월 주요 생산물의 상반기 계획 달성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12개 중요 고지의 상반기 계획을 초과 완수했다고 선전²⁾한 데 이어, 이번 전원회의는 당해 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성과 달성률의 부문별 차이는 있으나, 전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22년 말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목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북한언론에 보도된 수치만으로 각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삼갈 필요가 있다.

<표 2> 전원회의에서 언급된 경제 부문 주요 성과

	(12개 중요 고지)	(그 외 주요 생산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알곡 103%, 전력·석탄·질소비료 100%, 압연강재 102%, 유색금속 131%, 통나무 109%, 시멘트·일반천 101%, 수산물 105%, 철도화물수송량 106%, 살림집(건설 중 세대) 109%	전동기 220%, 변압기 208%, 베아링 121%, 전기아연 140%, 연 121%, 종이 113%, 소금 110%, 화장품 109%, 판유리 100%, 마그네샤크링카 104%
2020년 대비 증가율	국내총생산액 1.4배, 삼화철 3.5배, 선철 2.7배, 압연강재 1.9배, 공작기계 5.1배, 시멘트 1.4배, 질소비료 1.3배	

2020년 대비 경제회복을 대내외 선전, 과대평가 가능성에 유의

둘째, 2023년 국내총생산액 및 중화학공업과 연관된 주요 생산물 실적을 2020년과 비교하여 증가율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국내총생산액은 2020년 대비 1.4배 증가하였다고 밝히

1) 북한언론의 보도는 전년대비 생산량(%)인지, 목표 대비 달성률(%)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나 “알곡은 103% (중략) 살림집은 건설 중에 있는 세대수가 109%로서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되었다는 문구를 근거로 본고에서는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로 해석하였다.
 2) “자립의 정신, 자력의 창조본때로 전면적부흥발전을 위한 총진군에서 이룩된 소중한 성과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속에 주요부문들에서 상반기 계획 초과완수,” 『조선중앙통신』, 2023.7.4.

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은 북한경제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4.5%)을 기록한 해이다. 북한이 올해 경제 성과를 2020년과 비교하여 밝히고 있는 것은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한 수치가 크게 과장되었거나 국제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산정되었을 가능성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³⁾ 다만, 2020년 대비 가장 크게 후퇴한 부문이 중화학공업이었기 때문에 금속·화학 공업 부문의 회복에 북한이 크게 중점을 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2020년 대비 성과를 강조한 것은 올해의 경제회복세를 대내외에 선전하는 한편,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년)의 목표 달성을 내부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식량 생산에서 일부 성과, 금속·화학 부문의 부분적 회복

북한이 스스로 밝혔듯 올해의 ‘급박한 문제’는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올해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우리는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다양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곡물 생산을 목표 대비 103% 달성했다는 것은 한국 농촌진흥청의 추정치(전년대비 6%)와도 부분적으로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30만 정보의 간석지 개간 목표 달성, 강동온실농장 준공(2024년 2월 예정), 축산업(광천 닭공장)과 식료가공업(밀 가공공장) 성과 제시는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살림집 건설도 화성지구, 서포지구, 검덕지구 등 건설 중 세대를 포함하여 목표대비 109%를 달성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며 국내 자원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건설 부문에 주력하는 한편, 금속·화학 공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일관된 흐름이다. 특히, 금속·화학 공업은 북한이 지향하는 자립적 경제구조가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인 부문이다. 금속공업의 경우 대북제재로 수입이 어려운 철강을 대체하기 위한 ‘주체철’ 생산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⁴⁾ 화학공업의 경우 식량 증산에 필수적인 비료 생산과 직결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로 가장 타격이 심한 중화학공업의 회복이 급선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년 차인 올해 북한은 금속·화학 부문의 회복에 무엇보다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올해 국내총생산액이 ‘실질 GDP’를 의미하고 2020년 대비 1.4배가 되려면 2021~202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1.9%를 기록한다. 2021년에는 국경봉쇄가 이어졌고 2022~2023년 무역 재개가 이루어졌으나 2018~2019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이 연 10% 넘는 성장을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4) 전원회의에서 언급된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 용광로와 산소분리기 증설 관련한 보도는 올해 초부터 이어졌으며 최근 시운전을 마치고 시험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자세한 생산역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4년에도 12개 중요 고지의 강조를 비롯, 기존 경제정책 노선 지속

올해 성과를 크게 강조한 데 반해,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특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장성에 박차를 가하고 정비보강사업을 다그쳐 끝내며 새년도에도 12개 중요고지를 계속 내세”운다고 언급하여 경제정책의 방향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농업·농촌 부문의 발전 및 수산물 생산 증대, 살림집 건설, 기계공업, 경공업, 지방공업의 현대화 등이 별도로 언급된 점도 이전의 정책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 2021년부터 북한이 사활을 걸고 있는 농업·농촌 부문의 정책도 농기계 발전, 농촌경리의 기계화, 양정규율의 엄격한 준수, 농촌 살림집 건설이 주로 언급되어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올해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 부문의 여러 성과는 지난 3년간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점, 대북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달성까지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대외 부문

반미연대 진영외교 강화

북한은 당 전원회의에서 대외정책 기조로 “변화발전하는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책략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당의 존엄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1년 전의 입장과 비교하면, 국제정세 인식이 상대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뀌었고, 정책원칙에 ‘존엄사수’가 들어갔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간다는 입장이다. 핵무력 고도화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에 힘입은 공세적 대외정책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갈등적 국제정세와 북한의 대외적 고립과 파상적인 대북제재 등 3중의 악재에 직면해 북한정권이 전개할 대외정책 폭은 제한적이다.

위와 같은 대외 정세하에서 북한이 실제 전개할 수 있는 대외정책은 미국을 비롯해 서방진영과의 대립과 중국, 러시아 등 소수 반미세력과의 연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나라 집권당들과의 관계발전에 주력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지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 대적투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인 핵전

쟁위협소동에 대처하여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절대불변의 대적 대응의지를 재천명하”였다고 말했다. 적대세력을 향한 북한의 대외정책에는 외교가 설 자리가 없고, 대신 “강력한 실력행사로 제압해나가는… 대적투쟁”만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대통령 선거 시점으로 들어선 미국을 향해 북한 정권이 대화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긴장을 조성해 체제결속과 핵능력 고도화를 전개하면서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이다.

다른 한편, 김정은 정권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작년 양국과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과 국경 개방, 그리고 군사협력 등 냉전 해체 이후 가장 활발한 외교관계를 전개해왔다. 양국과의 변경지역 교류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도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 이익을 넘어 현 국제정세에 공동대응하는 3국 간 전략적 연대의 의미가 크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밝힌 군사 정찰위성 추가 발사 계획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국의 대북 군사도발 지지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2024년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최대 변수는 미국 대선 결과와 함께 중북 수교 75주년의 파장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2월 18일, 베이징 중북 외교장관회담서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묵과한 채 “내년 양국 수교 7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중북 우호협력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이 주는 시사점은 첫째, 2024년 한반도 정세를 낙관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의도적인 긴장조성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안보와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세를 관리하는 안보 및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나가고, 둘째, 남북 대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거 분위기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느슨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확고한 대북 연합 메시지를 발신함에 있어 한미 간 활발한 외교적 소통이 필요하고, 셋째, 중북 수교 75주년의 영향을 주시하며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넷째, 북한과 국제기구의 교류에는 일관된 협력 자세를 취하는 전략적 태도가 요망된다는 점이다.

사회문화 부문

교육 부문과 문화생활 여건 개선 성과 부각

2023년도 사회문화 부문의 평가는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과학 부문에서는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우주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부할 만한 성과가 나왔으며 교육 부문에서 혁신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교육연구원 개설과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개선, 본보기 학교와 유치원을 확충하고 육아정책 집행이 추진되어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실행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자평하였다. 보건 부문에서는 표준약국들을 건설하고 인민들의 건강 증진과 치료 예방을 위한 제약·의료품 공장, 질병예방 전문시설이 신설되어 인민생활 안정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체육 부문에서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서 국위를 선양했으며, 문화 부문에서는 소년단야영소, 야외극장 등에서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2024년도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학생 교육용품 지급에 주력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을 비롯한 문화 부문은 2023년도 성과에 토대하여 실천적 문제들이 지적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2023년도 사업의 경험과 교훈에 토대하여 문화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더 속도를 내라고 촉구하였다.

첨단과학기술발전계획을 목적지향성 있게 설정하고, 과학기술 발전의 통일적 지휘관리를 강조하며 과학기술 중시가 과학농사와 같이 ‘실제적인 생활력’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과학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집행해 나가는 체계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연구역량 강조는 교육 부분에서 전공 연관 과목에서 연구형 교수방법과 연구형 학습방법을 수용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다양화·실용화하여 선진국 수준에서 교육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연계되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과 가방, 신발을 공급한다는 2023년도 정책은 2024년도에는 경공업성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생산하는 기관과 단위의 중점 사업으로 제시됐다. 학생필수용품 공급은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경제실무적 사업이기 전에 ‘양양한 전도를 담보’하는 정치적 사업으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학생에게 필요한 필수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책사업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수령’의 정치사업으로 격상됐다.

향후 전망

제8기 제9차 당전원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도에 북한은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여 공세적인 대미, 대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 3기 추가 발사에 성공할 경우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세워 북한 군사력의 위협 수준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신냉전 구도를 활용하여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 및



군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외교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안보 긴장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균열시키려는 공세적인 행동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너무 밀착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력과 공조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4년에 예정된 우리의 4월 총선거와 미국의 11월 대통령선거 국면을 활용하여 내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작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의 이슈 주목과 대북정책의 우위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9.19 군사합의 폐기를 빌미로 이전보다 높은 수위의 국지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져 우리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의 원인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려는 대남 심리전에 역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일관된 통일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북한의 대남 심리적 공작에 휘말려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의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 확산할 수 있도록 통일 교육 및 정책 홍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총괄: 정은미 북한연구실장
- 정치: 김갑식 선임연구위원
- 군사: 홍민 선임연구위원
- 대외: 서보혁 연구위원
- 경제: 최지영 연구위원
- 사회/문화: 이지순 연구위원
- 대남: 장철운 부연구위원